

지역 소식통

정읍 백신 접종 준비 만전

정읍시가 정부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공급 일정에 앞당겨 집에 따라 백신접종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은 3월 말 100만 회분, 4~6월 중 6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접종대상자가 요양병원, 시설, 병원 등의 특정시설 중심에서 일반대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7월 개소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센터를 3개월 앞당긴다.

예방접종센터는 대규모 접종 공간과 교통접근성, 전기·조명·자가 발전 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 정읍체육관으로 정했다.

접종센터에서는 1개 팀 42명(의사 4, 간호사 8, 행정요원 등 30)의 인력이 투입돼 화이자를 비롯한 초저온 유통(영하 75C ±15)이 필요한 mRNA 백신접종이 이뤄진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육군 35사단과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 등 5개 기관과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62회 임시회를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의원은 5분 자유발언 '취약계층 복지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통해 결식우려아동에 지급하는 급식비 인상,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주민세 환원사업 종료로 인해 사라진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 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의 종사자의 활동비 인상, 경제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 10%를 늘여주는 정읍사랑 상품권 예산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어, 정읍시의회는 202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고,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부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칠보 버섯재배사 의혹 해소

주민감사 청구 결과 밝혀... 석산 개발 현행법상 불가 산지전용신고 수리 적법여부는 도에 재심의 검토 중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지적 사항은 면밀한 검토 후 시정조치 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3동(360㎡)에 대한 산지전용신고 수리 적법 여부는 전라북도도에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언론인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칠보버섯재배사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묻는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국장은 "칠보 버섯재배사 감사 청구 관련 쟁점은 앞으로 석산 개발과 산지전용신고수리 적법 여부"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석산 개발은 현행법 상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3에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2천미터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1천미터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5백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방도 49호선에 인접해 있는 버섯재배사는 법적으로 석산 개발 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라는 설명이다.

산지전용 신고수리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는 다름의 소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북도에 재심의 신청할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11일 칠보면 수처리 산272-1번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건축복합민원)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변경과 일부 주민들의 석산 개발 우려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공사를 중단

했으며 같은 해 8월 초 정읍시에서 공사 중지를 명한 바 있다.

관련해 칠보면 버섯재배사 관련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은 '칠보산 석산개발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수리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7일 전북도에 청구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의 감사 청구는 모두 8개 항목으로, ▲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지? ▲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지? ▲산지전용 신고 수리가 적법한지? ▲도로 연결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도로 구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 ▲버섯재배사 신축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가 적법한지? ▲산지전용·건축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정읍시에 대한 기 관경고 및 시정의 사과 요청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2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 임업인을 판단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 것에 대해서도 "수처리 621-2번지와 수처리 산272-7번지는 도로구역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 하는 것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 신고와 관련해 도로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지 않다"고 통보했다.

또 앞서 언급한 산지전용신고 수리가 적법한 것과 관련 전북도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영구건축물 3동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및 설치조건'에 부합하여 산지전용신고 협의가 적정하다. 다만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면적 7,250㎡ 중 비닐하우스 3동 360㎡는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통보했다.

도로 연결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북도는 "정읍시가 지난해 2월 24일 접수한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 연결허가 신청 건은 버섯재배사에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의 종류가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이므로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로 연결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는 같은 조례 '별표 5(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의 대상시설에 버섯재배사가 없다는 사유로 도로 연결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지난해 2월 25일 일반 도로점으로 허가함에 따라 변속차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 하지 않았고, 도로 연결허가 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 '도로 모서리의 곡선반지름: 3m'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 도로점으로 허가하면서 차량이 버섯재배사에 진입 시 도로 모서리 경사각은 완만하게 적용하여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없으나 버섯재배사에서 차량 진출 시 도로 모서리는 곡선반지름이 되지 않아 차량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도로 연결허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

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백승기 고창소방서장은 지난 15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행사에 동참했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고창소방서 백승기 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백승기 고창소방서장은 지난 15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행사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포스터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승기 서장은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이라며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포스터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변경

양우건설→대일내장산 컨트리클럽

부안군은 관광단지·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가 양우건설(주)에서 (주)대일내장산 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골프장 및 다양한 숙박시설은 물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각종 공공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을 도입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민간투자유치에 집중해 왔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5개 업체가 사업 참가의향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2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심의·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양우건설을 선정·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양우건설은 군과 협조해 관계기관 협의 및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군은 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와 지역상생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양우건설은 민간자본의 특성상 수익성을 중점으로 검토해야 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부안영상테마파크 개발방향에 대한 입장차이와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공익성과 기업의 수익성간 의견차를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상생의 공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우선해 양우건설과 상호 동의하에 협상을 결렬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대일내장산 컨트리클럽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격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자 모집 재공고를 위한 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주요 도시개발지역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31일까지 자진신고... 현시점서 5년 전까지 거래 내역 확인

최근 LH직원들의 부동산 부정매입 이슈 관련, 고창군이 지자체 차원의 공직자 관내 토지 거래 실태 파악에 나섰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LH 공공주택 개

발지구, 백양 택지구, 역사문화관광도로, 일몰경과 함께하는화습벨트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자체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후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 신고자료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